

## ‘강원상품권’ 250억원 조기 발행

도가 최근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강원상품권(Gang Won) 250억원을 조기 발행한다.

도는 올해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사·행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대금 중 3~8%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30억원을 발행해 도내 주요 NH농협 지점에 우선 배부했다. 이어 상반기 중으로 25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실물경제 전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소비진작 차원에서 250억원을 조기 발행, NH농협 340개 지점을 통해 본격 유통시키기로 했다. 또 사용 편의를 위해 지난 4일 강원상품권을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점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에서도 우선 강원상품권을 받은 후 NH농협에서 환전 시 간단히 등록할 수 있다. 이성현기자

## 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6일 오전 11시 춘천 스키이컨벤션웨딩에서 ‘2017 대한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에 대한 포상과 함께 회원사 자녀 및 도내 대학 건설 관련 학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된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오늘 신년인사회

### 회원사 포상·장학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6일 오전 11시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이날 도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한 회원사 포상과 함께 회원사 자녀와 도내 대학 건설관련학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유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 표창=△원주 신진종합건설(대표 김정섭)△춘천 금보종합건설(대표 김희대)△양구 진우종합건설(대표 조진목)△원주 남도종합건설(대표 윤차섭)△강릉 호원건설(대표 최상욱) ◇도교육감 표창=△춘천 연우건설(대표 임경태)△강릉 대한종합건설(대표 최한진) ◇원주국토청장 표창=△태백 대산종합건설(대표 권형기)△고성 신안종합건설(대표 남이섭)△철원 명현종합건설(대표 송문숙)△속초 포레스건설(대표 장우정) ◇

대한건설협회장 감사패=△원주 신한건설(대표 신주원)△동해 다국종합건설(대표 최우현) ◇도회장 공로패=△태백 고원종합건설(대표 김동수)△원주 덕천산업(대표 김성남)△인제 마하종합건설(대표 김진수)△홍천 선양종합건설(대표 박제수)△춘천 우창(대표 심창우)△양양장원(대표 엄정용) 안은복



## 건협 강원도회,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서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는 6일 오전 11시 강원도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 3층 스카이홀에서 '2017년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신

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도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에 대해 표창과 공로패가 수여된다. 또 회원사 자녀와 도내 대학 건설관련학과 우수학생 등 26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열린다.

## '부실공사' 법적제재 강화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3년이하 징역형' 규정 신설  
처벌 기간 '준공후~착공후'  
'건설기술공모제'도 폐지

부실공사를 초래한 설계·감리자와 허위 보고서를 쓴 감리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일부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했다가 특혜 시비들 부른 '건설기술공모제'는 폐지된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감리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신설했다.

우선 부실한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지금은 벌점·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하고 있다.

감리보고서의 허위 작성, 주요 구조부 검사내용 누락 등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정지 규정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체에만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감리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업무정지를 부과해 기술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망 등 중대사고에 따른 설계·감리자의 처벌기간도 '준공후'에서 '착공 후'로 바뀌 건설공사 중 사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만들었다.

건설기술공모제가 폐지되고 던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이 이를 대체한다. 건설기술공모제는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5년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협상,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면서 특혜시비 등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공모제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술협약제도의 근거와 기준도 담았다. 신기술 협약은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주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밖에도 정부·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의 임직원이 뇌물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

###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 성황

## "건설인, 새로운 시대 혁명 앞장서자"

황교안 대통령대행 "건설시장 확대에 적극 노력"  
최삼규 건단련 회장, 사회적 책임·윤리경영 강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사진)는 5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관계 인사 및 건설업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종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신년인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지난해 세계 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산업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산업·기술 간 융복합, 스마트 건설 등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재정 조기집행, 해외 보증 강화, 수출금융 확대,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 조성 등 경제 활성화와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

최삼규 회장은 "정유년 새해는 모든 건설인의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국운이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건설인들도 친환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요창출과 경영혁신, 윤리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의 충실한 이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 감리보고서 허위작성 기술자 ‘최대 2년 업무정지’

## 뉴스 돋보기

### 부실공사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국토부가 4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설계·감리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 특히시비에 휘말린 건설기술공모제 폐지로 요약된다.

특히 그동안 업체에만 부과됐던 행정처분을 감리(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도 부과할 것이 주목된다. 행정처분 강도도 업체(건설기술용역업자)보다 세다.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체가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수도권과

속철도사업(수서-평택) 때 공사비 편취 및 감리원의 보고서 허위작성 사례가 적발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설계·감리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초래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해진다. 지금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때 수요예측 부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역을 시키지 않는 금고형이다. 나머지 부실시공에 대한선 벌칙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부과하던 것을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감리자의 업무 부실에 따른 벌칙 신설을 통해 기술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효

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경제성·능률성 외에 안전성을 추가했다. 발주청과 설계·감리업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기술공모 제도는 논란 끝에 폐지가

###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경제·능률성 외 안전성 추가

결론내렸다.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0년 이후엔 연평균 2~3건 정도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 300억원 이하 공사 중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환경공사에 활용됐다. 문제는 건설기술진

흥법에만 규정이 있고 국가계약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 데다, 낙찰자 선정절차도 불명확해 특혜시비가 생겼다는 점이다. 기술공모의 경우 탄기(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방식은 유사하지만 국토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로 탄기로 발주하려면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300억원 미만 공사를 탄기 대신 간편한 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해서 문제가 됐다.

실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전주시가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창의적이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가 아니고 입찰의 공명·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 경쟁 발주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와 정치

권에서 건설기술공모제 폐지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고 오용의 여지가 커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협회의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위탁사업기관 임직원들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은 공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 부패 발생 시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 이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제15323호

cnews.co.kr



“새롭게 도약하자”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5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관계 인사 및 건설업계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최삼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건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SOC 예산 11兆 상반기 풀어... ‘안전’에 3兆 이상 투입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18조1000억원의 60.5%인 11조원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산 조기집행이다.

아울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LH),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 공기업의 사업 예산도 전체 25조7000억원의 58.3%인 1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꾸려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은 특별관리한다.

순병석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수년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 55~60% 사이

였지만 올해 목표치를 약간 더 올렸다”며 “그만큼 현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SOC 내진보강 투자도 대폭 늘린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541억원에서 올해는 1712억원으로 216%나 증액했다. 국토부 소관 시설 2만 2400개소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1917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완료시기도 2024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65개소를 포함해 안개사고 취약구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량 등 안전분야에만 3조원 넘게 투자한다.

민간투자 시장의 일감도 늘린다. 평택-

산하공기업도 예산 58% 조기집행 내진보강 예산 전년보다 216% ‘1’ 6월에 중장기 민자철도계획 수립

스톡 중심 인프라 투자전략 발표 ‘종합성능지수’ 개발 밑그림 작업

오송, 용산-망우 등 철도 병목구간과 김천-거제 등 미연결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6월에 ‘중장기 민자철도사업 추

진계획’을 마련해 민자사업 후보노선을 정하고 세부실행 방안을 전다.

감축기조인 SOC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장기플랜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SOC 투자 패러다임을 바꾸고 양적·질적 수준의 평가를 위한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연내 만들기로 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활용해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체감도를 높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28분인데 비해 한국(58분)은 유일한 50분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통혼잡비용 비중 역시 미국이 0.89%, 한국이 2.16%로 격차가 크다.

교통혼잡비용도 각각 1600억원, 3조3000억원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지중철 재정담당관은 “연장(km) 등 스톡 중심의 인프라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시설의 노후도와 편의성, 유지보수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인프라에 대한 종합성능지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도로지수’, ‘철도지수’처럼 시설별 지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주2공항, 김해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신설해 사업 속도를 높 이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 “工期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시켜야”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문제 개선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이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자율조정 항목을 통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 연장과 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인

## 추가 연장 고려하지 않은 신청횟수 제한도 개선 필요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공기 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서 제외된 탓에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조정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선조정 한 뒤, 사후에 기재부가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 연장 간접비가 자율조정 항목에서 빠져 있다 보니 발주기관은 기재부와 사전 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1회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만약 발주된 공사기간이 연장돼 2018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면, 전년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사기간이 다시 연장될 경우 문제가 된다. 시공사가 이전에 1회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했다면, 이후 공사기간이 또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선 시행일이 2017년 1월1일 이후 발주 공사인 점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시행일이 2017년부터라 그 이전 발주 공사 중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한 추가비용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닫혀 있다”며 “이전 발주공사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 “올 강원 건설경기 위축 우려”

올해 강원지역의 건설 경기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활황세인 부동산 경기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축 조짐의 건설 경기를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5일 ‘2017년 강원 경제전망’ 정책메모를 통해, 지난해 후반부터 공공 사업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올해 건설 수주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타당성조사 등을 대거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장 올해 사업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발연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분야에서는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구간)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됐다. 평택~삼척, 포천~철원 등 도로사업이 국가관리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

철도의 경우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가시화됐고,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 12건의 사업이 반영됐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건설 착수 및 속초항의 10만t급 크루즈 모항 육성계획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 강원발전연구원 전망

지난해 후반부터 공공 수주 감소  
예타통과사업도 연내 추진 힘들어

서울~속초 고속도 완공 등 따른  
기대감으로 투자수요 증가 예상  
부동산 경기는 활황세 이어갈 듯

들어간 것도 성과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특수가 끝났고, 계획 중인 SOC 사업의 추진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 도내 건설수주 시장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발연은 “국가계획에 반영됐거나 타당성조사 대상인 SOC 사업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논리 개발과 지속적인 정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도내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도내 부동산 시장은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도의 토지거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6%로 전국 1위였다.

주택시장도 지난해 10월까지 분양승인 누계가 1만728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전년도 물량보다 64.8%나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주택착공 및 분양승인 물량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지역의 규제에 따른 반향과 원주~강릉 복선철도, 서울~속초 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기대감으로 투자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과거 금리변동이 있더라도 도내 주택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수요감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강발연은 전망했다.

강발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주~여주 철도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거환경과 교통, 난개발, 투기 등 도시화와 관련한 부작용 방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